

차기 검찰총장 후보 누구?

퇴임자 컴백이나 외부인사 수혈이나

검찰 초유 '지휘부 공백'... 후임 인선 촉각 권재진·문성우·명동성·이귀남 등 재부상

검찰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전격 사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으나 장기적인 지휘부 공백이라는 최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특히 검찰은 총장과 차장, 전국 고검장 전원,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한꺼번에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후임 총장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초유의 수뇌부 공백 후임 인선 '촉각'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천 후보자에 대한 총장 내정을 공식 철회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청장 등 지휘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또 지휘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후임 총장 인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되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15일 지휘부 공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장 직무대행인 한명관 대검 기획조정부장(50·사법시험 25회)의 지휘 아래 확대간부회의를 여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부분의 중요사안을 총장과 '지휘부'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당분간 주요 사건처리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천 후보자 내정 이후 사법시험 선배와 동기 기수가 모두 은퇴함에 따라 검찰의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고검장급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후임 총장, 전직 고검장급 유력외부 '수혈론'도 =현재 후임 총장으로는 최근 은퇴한 전직 고검장급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단기간에 조직을 추스르려면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텁고, 검찰이 처한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검찰 안팎의 의견이 일치한다.

후임 총장에는 권재진(56·20회·대구) 전 서울고검장과 문성우(53·21회·광주)

전 대검 차장 등 당초 유력한 총장 후보들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권 전 고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복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뛰어난 친화력에 사안의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원칙에 충실한 업무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전 차장은 광주일고·서울 법대를 졸업했으며, 수사는 물론 검찰 인사와 조직 등 행정 업무에도 정통해 검찰 내부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아울러 명동성(56·20회·강진) 전 법무연수원장과 이귀남(58·22회·장흥) 전 법무부 차관 등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 인사는 지역 안배를 우선 고려한다면 문 차장과 함께 기용 가능성이 높다.

이들 외에 김준규(54·21회·서울) 전 대전고검장과 문효남(54·21회·부산) 전 부산고검장, 신상규(60·21회·강원) 전 광주고검장, 이준보(56·21회·강진) 전 대구고검장 같은 맥락에서 후보군을 이룬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검찰을 구원하기 위해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외부인사를 '수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2년 '이윤호 게이트' 사건으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자 서울고검장 출신인 이명재 변호사를 총장으로 기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외부인사로는 정진규(63·15회·서울), 이정수(59·15회·충남), 고영주(60·18회·충남), 박상길(56·19회·서울), 김태현(54·20회·대구)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도덕성 시비로 지난 14일 전격 사퇴를 표명하면서 검찰의 앞날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나로호 발사 준비 이상무

오늘 추적·관제장비 운용 시험...20일 조립 완료

"나로호 발사 준비가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발사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종점검 등이 진행되고 있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0일 발사예정인 '나로호'의 최종 점검과 조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16일 나로우주센터 추적 및 관제장비 운용 시험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그동안 항공기를 이용해 나로우주센터와 제주 추적소의 추적·관제장비 운용상태를 모두 14차례 점검했다. 또 연구진들은 현재 국내에서 자체 개발해 나로우주센터로 옮겨진 발사체 2단과 과학기술위성 2호, 위성 보호덮개인 페어링(fairing)을 조립 중이며, 18일 상단 조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러시아에서 인도받아 우주센터로 이송된 발사체 1단은 오는 17일까지 탑재 장비 기능점검과 발사체 접촉점검 등을 마치고 20일 상단과 총조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두 조립된 나로호는 한·러 공동으로 수행하는 비행준비 최종검토를 거쳐 발사 이틀 전인 28일 발사 시나리오에 따라 발사대로 이송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나로호 총조립이 완료돼 발사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전후해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준비상황을 종합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내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발사일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발사대 인증시험 중 나로호에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한 후 발사를 위해 이렉터(erector) 분리를 시험하는 장면.(영하 185°C의 액체산소가 주입되어 발사체 표면에 얼음이 얼어있다.) /연합뉴스

점검하고 나로호 발사 하루 전에는 최종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문광부, 10인대책위 합의안 수용할까

22일 장관 면담 2개안 제시...박시장 "강제철폐 나서면 막을 것"

'옛 도청 별관 문제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가 별관 문제 대안으로 제시한 '오월의 문'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입장이 오는 22일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10인 대책위 간사위원인 박경태 광주시장은 1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오는 22일 조영택 의원과 함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10인 대책위가 마련한 두 가지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는 두 가지 안 중 한가지 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5월의 문은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설계자 의견이 있고 1/3 존치안은 부분설계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혀 '1/3 존치안'에 무게중심을 뒀다. 5월의 문은 별관 중앙 1.2층일부를 뚫어 통로를 만드는 대안으로, 지역 12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시민사회원탁회의'가 10인 대책위에 제시한 방안이다.

그는 "정부가 이들 안에 대해 깊은 고민

을 할 것이며, 결국은 장관과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것이다"며 "어쨌든 해결방안은 나올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전당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에 들어갈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광주시가 중심이 돼 콘텐츠 개발 팀과 운영준비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옛 전남도청 별관을 강제 철거하지 않겠다는게 확고한 신념이다.

법집행에 나서더라도 이를 막을 것이다"고 밝혀 별관 완전철거에는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별관 철거를 고수해온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이병훈 추진단장은 최근까지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오월의 문과 3분의1 이상 보존안 모두 현실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추진단은 또 전당 건립사업이 특별법까지 마련된 국책사업이므로 일부단체의 반대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 단장은 "현재 10인대책위가 공식합의안을 낸 만큼 정부가 검토를 거쳐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4대강 수계 특별법 한 법률로 통합

4개로 나뉘어 각각 운영되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특별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일된다. 환경부는 15일 4대강 수계 특별법을 하나로 묶어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수계법)을 입법에 고쳤다.

정부는 1998년부터 추진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1999년 한강 수계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2002년 낙동강 등 나머지 3대강 수계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비슷한 법 체계와 내용을 가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특별법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주민과 기업 등이 꾸준히 불편을 토로해왔다.

4대강 수계법은 기존 특별법에서 각각 적용했던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주민지원사업 시행,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규정을 통합했다.

농어촌 민박사업(펜션)의 입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통합 법에 신설하고 수변구역 내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종전 정부 고시로 운영했으나 법률 조항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상수원을 보호하고 오염원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는 수변구역내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수변구역 지정은 유지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오직 7월, 뉴 비틀 컨버터블레를
총기 비용 없이 3개월 간 무료로 드립니다

The Original German Volkswagen



Volkswagen, Das Auto

Your Volkswagen Partner
[광주] 지오후우스: 광주시 서구 화정동 / Tel 062-351-9500